

한국전쟁 왜곡, 중공군 영웅 묘사… 中 영화 개봉 찬반논쟁

〈중국인민지원군〉

영화 '1953 금성 대전투' 16일 개봉 노골적 왜곡에도 韓, 이의제기 없어
韓, 中 유해송환 등 배려하는 만큼
中의 역사왜곡에 침묵해선 안돼

중국의 역사왜곡이 대한민국 안방까지 밀려온다. 국군과 유엔군을 침략자, 우리의 강토를 짓밟은 중국인민지원군(이하 중공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영화가 IPTV 등의 플랫폼을 통해 개봉된다. 이 영화 개봉의 찬반논란과 함께 중국에 대한 지나친 저사세에서 벗어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의 영화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개봉된 '금강전'이다. 개봉된 시기는 '항미원조(抗美援朝) 기념일'과 맞물렸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한반도를 침략한 미국에 항거해 조선(북한)을 도운 전쟁'으로 정의하고 교육하고 있다. 개봉 당시 이 영화는 '한국군의 사단의 피로 물들인 인민군 최후의 전투'라고 홍보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1953 금성



영화 금강전의 한국 포스터. 제작비 1000억을 들여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전쟁 역사왜곡 영화다. /네이버 캡처

'대전투'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프로파간다를 한층 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전쟁 역사왜곡 영화 심의통과 놓고 찬반논쟁

7일 인터넷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오는 16일 예정인 금강전의 개봉에 대

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이 영화의 심의를 통과 시킨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심의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입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과 시민의 불거리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미디어 통제를 하는 중국과 같은 것'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준우 국민의 힘 대변인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북한에서 극장 개봉할 수 있을까. 중국에선 가능할까"라며 "이게 자유로운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영화 금강전의 개봉을 반대할 수 없다는 쪽에 힘이 쓰린다. 오히려 이러한 논쟁을 부각하거나, 언론에서 다룰수록 중국의 프로파간다 영화에 대한 관심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진핑 정부 들어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왜곡은 노골적으로 심해졌다. 그럼에도 진보·보수를 아울러 한국 정부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을 우호적 국가, 인도주의적 차

원으로 보고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공군의 유해를 모셔왔다.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중국에 지나치게 저사세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적 차원의 적군묘지와 유해송환…이젠 항의도 해야

휴전선과 인접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37번 국도에는 중공군과 북한군 전사자의 유해를 매장한 '적군묘지'가 있다. 이 묘지는 자국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적군의 유해를 모아 묘역을 구성한 이례적인 곳이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도주의 정신'으로 찬사를 받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제네바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우리 군이 발굴한 유해 중 중공군으로 확인된 유해와 유품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중국으로 송환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정부는 중공군 유해 송환을 이어 왔다. 국방일보 3일자 1면에는 전날 진행된 제8차 유해송환식 사진을 1면 상단에 올랐다. 중국에 대해 최고의 존중과 배려를 하

는 만큼, 우리 강토를 지킨 국군 선배와 유엔군의 헌신에 욕을 보이는 중국의 언행에 정부가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영화 금강전에는 국군과 북한군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영화 배경인 1953년 7월 13일 강원도 김화군, 화천구 간동면 일대에서 치뤄진 금성전투는 국군에게 빼아온 역사다. 국군은 중공군의 기습으로 금성 주둔지 후방 4km까지 후퇴했고 193km²의 영토를 잃었다. 이 전투로 국군은 전사 1701명, 부상 7548명, 실종 4136명이라는 큰 손실을 입었다. 중국의 프로파간다 영화가 그렇듯이 영화 금강전도 국군의 복침야욕을 막은 중공군이라는 역사왜곡을 담고 있다.

유해발굴 업무를 했던 퇴역 군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한국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된다"면서 "중공군 유해는 중국 정부 예산을 들여 별도 진행을 하던, 중국이 한국에 요청을 하는 식으로 승인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구직수당 받는 '국민취업지원' 요건 완화

고용부, 관련법 개정안 의결·시행
1인 가구 91.4만→109.6만원으로

최대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취업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은 기존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은 가구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 요건이 60% 이하로 완화되면 올해 1인 가구 기준 91만4000원에서 109만60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243만 8000원에서 292만5000원으로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요건도 가구 합계액 4억원 이하

로 완화돼 더 많은 구직자가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일 경험·복지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1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위기가 지속되면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군 장병도 취업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군 복무 중인 경우 취업 지원이 제한됐다.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구직촉진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의결에 앞서 고용부는 청년(18~34세)의 구직촉진 수당 요건을 중위소득 120%·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려면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빼다.

영세 자영업자도 제도 참여 요건을 연매출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옮겨 완화했다. 주점 등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종사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9월 1일 기준 총 40만5000명이 신청해 현재 32만4000명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가능하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청년내일채움공제' 2만명 추가지원

고용부, 2년간 1200만원 마련 기회

중소기업 취업시 2년간 총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청년 2만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2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보태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돋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당초 올해 사업 목표였던 10

만명을 조기 달성했고,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2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추가 지원분이 만큼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이 2만명으로 한정돼 있어 장기 실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견기업도 빠졌다. 기업자의 임금 요건 상한도 월 3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5주년 행사. /고용노동부

는 2016년 도입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48만6435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일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대비 1~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포인트 높아 장기근속과 경력을 쌓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으로 옮긴 청년 중 약 88%는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세종=원승일 기자

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여명 캠프 대변인은 7일 본지와 통화에서 "모병제·지원병제 전환은 이미 준비해왔던 공약"이라며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측면도 있고,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으니 군을 가고 싶은, 군이 필요한 청년을 모집해 직업 전문군인 체제로 가야 미래 전자전 시대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이라고 흥 의원 입장을 부연해 설명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흥 의원의 모병제 전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SNS에 "저도 D.P.를 보고 우리 군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와 폭력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는 그대로 두고 모병제로 바꾸면 군대에 가는 이들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거냐. 우리나라에는 아직 모병제를 못 할 이유가 더 많고 모병제는 정의와 공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지난 7월 4일 '한국형 지아이빌(G.I.Bill·제대군인 지원법)'을 공약하며 "의무 복무자에 주거와 직업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